제32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 무 현 황

2013. 10.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I. 일반 현황 ····· 1

1. 기능 및 조직 ····· 2

2. 예산 현황 ····· 4

3. 주요 정부입법 추진 계획 ····· 5

4. 산하 공공기관 현황 ····· 7

II. 2012년 국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 ····· 8

III. 최근 경제동향 및 평가 ····· 12

IV.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 ····· 15

1. 실물경제 활성화 추진 ····· 16

[1]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성화 지원 강화 ····· 17

[2]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 19

[3] 지역경제 활력 제고 ····· 21

2. 협력 생태계 조성 ····· 23

1 중소·중견·대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 24

2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25

3 유통법의 차질없는 시행 및 상생·발전 유통생태계 조성 ··· 26

3. 산업부문 창조경제 구현 ····· 27

1 창의·융합형 우수인재 양성 ····· 28

2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육성 ····· 30

3 창의를 실현하는 산업환경 조성 ····· 32

4. 통상-산업간 연계 강화 ····· 43

1 개방형 통상정책 지속 추진 및 성과 극대화 ····· 35

2 전략적 산업자원통상협력 추진 ····· 37

3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인프라 확충 ····· 38

5.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수급 ····· 39

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40

2 전력 관련 주요 현안 ····· 42

3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 ····· 45

4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 47

수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 49

Ⅰ. 일반 현황

1 기능 및 조직

◈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 (정부조직법 제37조)

□ 조직 : 1·2차관, 본부(1차관보, 6실, 2국, 18관, 2단, 71과), 소속기관(7개)

- ○ **기획・직속 분야** : 기획조정실, 감사관 등 4관 7과
- ○ **무역・투자 분야** : 무역투자실 3관 10과
- ○ **산업정책 분야** : 산업정책실 3관 12과
- ○ **산업기반 분야** : 산업기반실 3관 11과
- ○ **통상 분야** : 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 2국 9과, 통상교섭실 2관 1단 7과
- ○ **에너지・자원 분야** : 에너지자원실 3관 1단 15과
- ○ **소속기관*** : 2위원회, 2원, 2소, 1기획단

*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기술표준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광업등록사무소, 광산보안사무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정원 : 1,281명 (본부 844명 + 소속기관 4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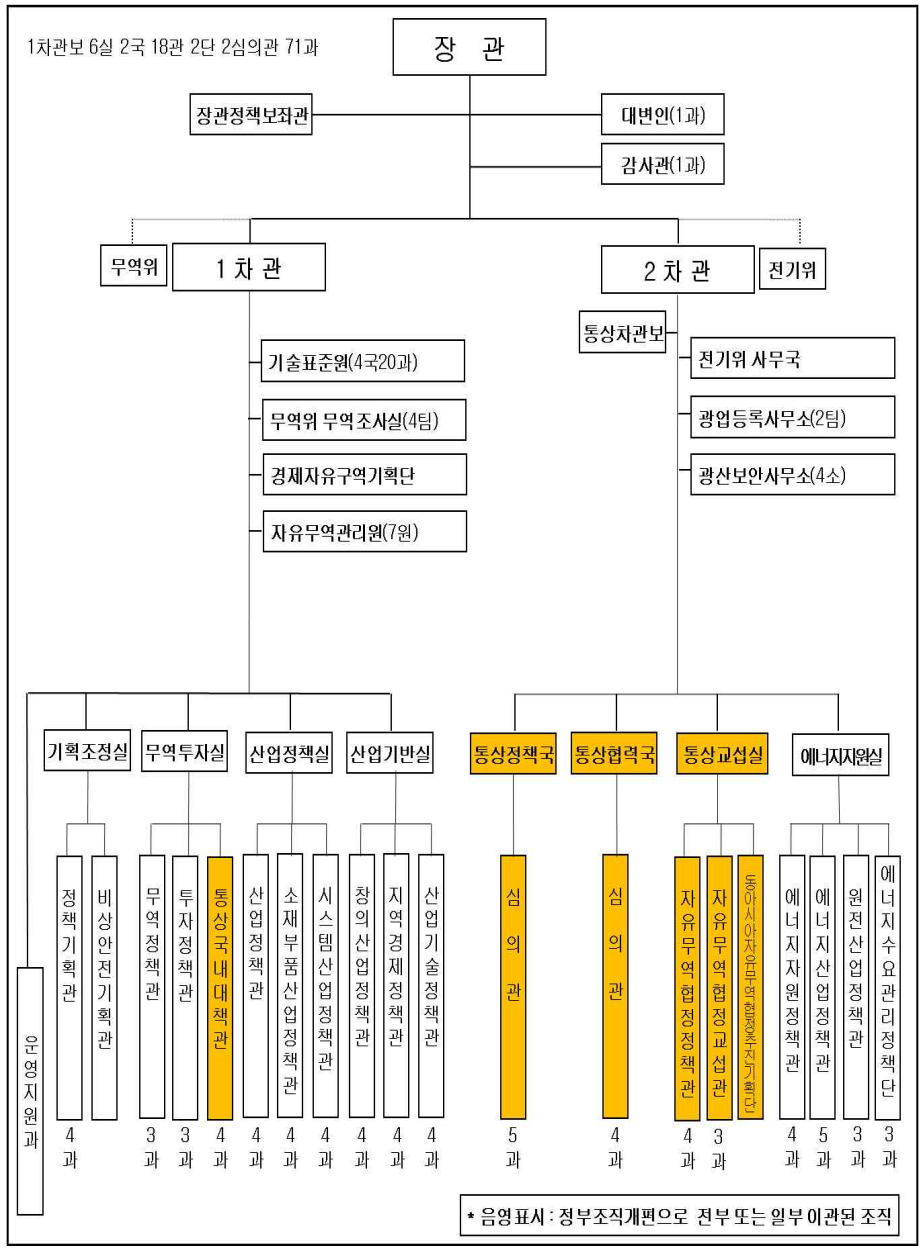
* 무역위원회 48명, 전기위원회 9명, 기술표준원 220명, 자유무역지역관리원 79명, 광업등록사무소 33명, 광산보안사무소 33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 15명

<계급별 정원>

('13.10월 현재)

구분	정무직	고공단 가	고공단 나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연구관	연구직 연구사	기능직	계약직	계
본부	3	7	23	19	54	91	303	200	44	43	24		1	23	9	844
소속기관		2	6	1	30	8	86	121	32	17	6	42	26	60		437
총 계	3	9	29	20	84	99	389	321	76	60	30	42	27	83	9	1,281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조직도**



2 예산 현황

가. 2013년 예산 규모

□ 2013년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8조 4,595억원***

<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세입·세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세입(A)	세출(B)	수지(A-B)
합 계	**100,131**	**84,595**	**15,536**
일반회계	940	26,716	△25,77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22	14,066	△13,84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1,503	24,604	36,89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80	121	159
전력산업기반기금	25,677	17,040	8,63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1,361	2,008	9,353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148	40	108

* 1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금액

나. 2013년 예산 중점 투입 분야

1 글로벌 경기위축, 신흥국 성장 등 대외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

○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무역보험 지원 등 무역촉진 노력 강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2년) 1,918억원 → (13년) 2,156억원
* 무역보험기금출연 : (12년) 300억원 → (13년) 2,500억원 등

2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 대·중소·중견기업간 동반성장 등을 통해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 조성

○ 산업간 융합, 과학기술과 산업의 접목 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 산업부 소관 R&D 예산 : (12년) 29,968억원 → (13년) 31,782억원

3 에너지·자원 수급 위기에 철저히 대비

○ 전력수요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산업분야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지원

* 전력효율향상 : (12년) 470억원 → (13년) 600억원 등

○ 해외자원개발을 내실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성장도 지원

3 주요 정부입법 추진 계획

□ **'13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추진 법률안은 총 18건**

○ 현재 **5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나머지 **13건 법률안**은 금년 중 **제출 예정**

*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 **주요 법률안 내용**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 - 국정과제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면제 및 환급관련 조항을 법률로 규정
- 종합보세구역내 수출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행위 허용

② 계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 검사이력 관리 등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계량종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
- 계량기 조작 불법 이익금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③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

- 새로운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의 주요 시책 반영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 개발사업시행자(SPC) 자격요건 완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일괄 승인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공모제 도입

⑤ 실용신안법(일부개정)

- 외국어 실용신안 등록 출원 제도를 도입 등 출원 인정 요건 완화

참 고 2013년 정부입법 추진계획 목록

법률명	주 요 내 용	비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면제 및 환급관련 조항을 법률로 규정 ○석유수입판매금의 사용용도를 현실에 맞게 규정	기제출(5)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정의의 분야 명칭에 대한 개정 ○'뿌리산업진흥센터'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특회계 예산을 부처 소관별로 구분하여 편성·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에특회계로의 의무 전입 규정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실용신안법	○실용신안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	
특허법	○특허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가스안전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원 다양화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대상 현실화(서민생활 안정 및 약자 보호)	제출예정(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특별법	○경제자유구역 개발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 및 절차를 정비 ○법제처의 법령정비 통보에 따른 법령정비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 ○계량기 조작 불법 이익금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위반업소명 공표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 체계 재정립 및 위상 확립, 표준·인증 거버넌스 체계 확립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산업부장관의 시정요구권 및 관리 감독 강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능에 일자리진흥촉진 기능 추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의 적용범위 개선 및 기술료 징수의 기준 변경	
산업표준화법	○KS 서비스 대상 범위를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인증기관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 정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비축기지 저장탱크 부속 소방설비의 작동점검에 대한 관리자의 주의관리 의무 신설 및 정밀점검 기준 근거 마련	
석탄산업법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근로자수 제한 법조항 신설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법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가산금 요율조정 ○특정물질 제조·수입 허가권에 대한 양·수도 근거 마련	
품질경영·공산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체제의 국가 단일인정체계 구축 ○자기적합성 제도 확산 여건 조성 및 온라인을 통한 미인증 공산품 유통 방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2013년도 총리실·안행부의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 후속조치 ○국가핵심기술 보호기반 강화 ○기술유출 예방·대응체계 효율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새로운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 정비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의 주요 시책 반영 ○지역위 권한·기능 강화 및 광특회계 개편	

★ : 국정과제 이행법안

4 산하 공공기관 현황

□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16개, 기타 공공기관 13개 등 **총 41개**

○ 공공기관의 **정원은 71,045명, '13년 예산은 약 181조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

구분	유형	세부분류기준	대 상 기 관
공기업(12)	**정원 50인 이상, 자체수입액 비중 50% 이상으로 기재부 장관 지정 기관**		
	시장형(10)	자산 2조원 이상,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85% 이상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준시장형(2)	시장형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준정부기관(16)	**정원 50인 이상, 자체수입액 비중 50% 미만으로 기재부 장관 지정 기관**		
	위탁집행형(14)	정부 정책 사업 위탁·대행	· **(산업분야)**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시험원, 디자인진흥원, 세라믹기술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무역분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에너지분야)**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광해관리공단, 전력거래소, 에너지기술평가원, 석유관리원
	기금관리형(2)	기금 관리 위탁	무역보험공사, 원자력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1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 기재부 장관이 지정**		
	한전 자회사 (4)		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연구지원·교육훈련 (1)		기초전력연구원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1)		인천종합에너지㈜
	그 밖의 기관 (7)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표준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원자력문화재단, 로봇산업진흥원

Ⅱ. 국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가. 개괄

□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66건으로 51건은 조치 완료, 15건은 추진 중**

○ 기획조정 분야 5건, 산업 분야 25건, 무역투자 및 통상* 분야 15건, 에너지·자원 분야 21건

	전체	기획조정	산업	무역투자·통상	에너지·자원
건 수	66	5	25	15	21
조치완료	51	4	24	8	15
추진 중	15	1	1	7	6

* FTA 보완대책 등 통상 관련 12건은 금년 조직개편 이후 외통위에서 이관

나. 주요 내용

□ **기획조정 분야** (5건)

○ 산하기관 관리감독 개선, 해킹피해 방지책 등 4건 조치 완료, 임원 인사기준 합리화는 기재부 소관으로 하반기 법규 개정 예정

□ **산업 분야** (25건)

○ 중기 적합업종 제도 개선, R&D 사업관리 강화 등 2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기타 실태조사 중인 사항은 하반기 보고 예정

□ **무역투자·통상 분야** (15건)

○ 경자구역 내실화, FTA 추진 전략 보완 등 8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기타 사항들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 예정

□ **에너지·자원 분야** (21건)

○ 동계 전력수급 대비, 석유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2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은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 중

참 고 201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66건)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획조정 (5)	산하공공기관 안전사고 관련 관리감독체계 재점검 및 개선	완료
	산하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징계기준 강화	완료
	산하 공공기관의 장단기 부채축소 방안 마련	완료
	산하 공공기관 해킹피해 방지대책 마련	완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기준 재정립 및 투명성 제고	추진 중
산업 (25)	구미국가산업단지 불산 누출사고 관련 개선방안 마련(3건)	완료
	대중소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7건) -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편법 유통시장 진출 대책, 불공정거래 행위 재발 방지 등	완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관련 개선방안 마련(4건) - 중복지원 방지, R&D 자금지원 확대 등	완료
	R&D 사업 관련 개선방안 마련(5건) - 지역편중 해소, 높은 사업성공률 시정, 사업화 실적 부진 등	완료
	노후산단을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	완료
	장관 포상시 R&D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부적격자 포함 방지	완료
	i-fashion 사업 관련 R&D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완료
	ICT 및 전력 담당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 대책	완료
	신성장동력펀드 투자실적 저조문제 대책 마련	완료
	TP 연구비 부당사용 관리·감독 및 장비가동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중
무역투자·통상 (15)	경자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율 저조에 대한 내실화 방안 마련	완료
	KTNET을 통한 부당한 수수료 징수 중단 및 반환 조치	완료
	한·콜롬비아 FTA와 같은 회의록 없는 회의 근절	완료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강화	완료
	동시다발적 FTA 전략 보완 및 향후 계획 수립	완료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의 조세수입 증가 추정에 대한 검증	완료
	FTA 경제효과 분석시 철저하게 경제논리 입각한 검증 필요	완료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완료
	경자구역 개발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 검토	추진 중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집행률 저조	추진 중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 관련 한·EU 대외가공위 결과보고	추진 중
	한·미 FTA ISD 독소조항 폐기 필요	추진 중
	한·캐나다 FTA 관련 향후 계획과 쇠고기 문제 대책	추진 중
	국회의 통상권한 강화를 위한 통상절차법 개정 필요	추진 중
	한·미 FTA 체결 후 ISD 소송 제기 대책 수립 시급	추진 중
에너지·자원 (21)	EMS 및 MOS 활용실태 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보고	완료
	10년간 미운전 발전요금을 환수하여 한전에게 돌려주는 방안 강구	완료
	동계 전력수급 위기 대비 철저한 대책 마련	완료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부하관리사업 문제점 개선 대책 마련	완료
	밀양 송전선로, 가로림 조력 등 현행 전원개발 추진방식 개선	완료
	한전 및 발전자회사 통합 및 시장형공기업 해제 방안 검토	완료
	배전설비 등 전기설비 고장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마련	완료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추진 중단 여부 검토	완료
	경주 방폐장 관련 지하수 유출문제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대책	완료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완료
	석유제품 유통에 있어 공정거래시스템 작동 방안 모색	완료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지원 적절성과 효과를 검토하여 개선책 마련	완료
	그린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및 지원체계 구축	완료
	천연가스 직수입 요건 완화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	완료
	농어촌 도시가스배관 확충방안 및 요금의 지역형평성 문제 개선	완료
	전기요금 구조개편을 위한 장기 로드맵 마련 및 보고	추진 중
	민간발전사의 과다이익 방지를 위한 보정계수 적용방안 검토	추진 중
	전력공급자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3자 검사제도 도입	추진 중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방안 마련 및 공론화 추진	추진 중
	해외자원개발 투자대비 성과저조, 공기업 부채급증, 자주개발률 개념의 적절성, 성공불 융자 운용 문제 개선방안 마련	추진 중
	셰일가스 도입을 위한 LNG 선박 관련 국적선 확보 노력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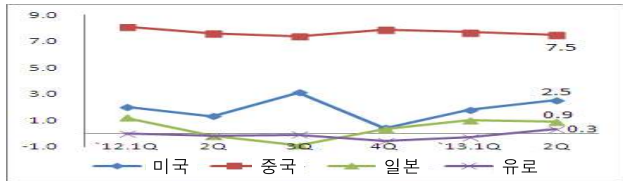
Ⅲ. 최근 경제동향 및 평가

1 최근 실물경제 동향

□ **(세계경제)** 美·日 등 **주요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美 재정불안·中 성장률 둔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

○ **美 성장세 확대**('13.1Q 1.8% → 2Q 2.5%), **유로존도 7분기만에 (+)성장** 전환

<주요국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



○ 다만, 최근 연방정부 폐쇄·채무한도 조정기한*(10.17) 관련 **美 재정 불안** 및 **양적완화 축소** 논의 등 미국發 **리스크 요인 부각**

* 기한내 채무한도 상향조정 실패로 美정부 채무불이행 선언 시 급격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 **(국내경제) 2/4분기 성장률이 9분기 만에 1%대** 회복, 생산·고용 등 **실물지표도 개선세**이나 **설비투자**는 **부진**

* 실질 GDP(전기비,%): ('12..3/4) 0.0 → (4/4) 0.3 → ('13.1/4) 0.8 → (2/4) 1.1

○ **(생산·소비) 전산업생산**은 **5개월 연속 증가**(전년대비)하였으며, **민간 소비**도 그간 **부진에서 다소 회복**하여 증가세 확대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비,%) : ('13.2) △1.9→(3) △0.8→(4)3.7→(5)1.2→(6)0.4→(7)1.5→(8)2.8
* 소매판매(전년동월비,%) : ('13.2)1.6 →(3)1.8→(4)2.1→(5)0.6→(6)0.8→(7)1.0→(8)2.5

○ **(수출)** 9월 **일평균 수출**이 **역대 최고치**(22.4억달러)를 갱신하는 등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20개월 연속 흑자 기록**

*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 ('13.3)0.2→(4)0.4→(5)3.2→(6) △1.0→(7)2.6→(8)7.7

○ **(고용)** 민간부문 취업자수 증가로 **안정적인 고용증가세 유지**

* 취업자 증가(전년동월비, 만명) : ('13.3)24.9→(4)34.5→(5)26.5→(6)36→(7)36.7→(8)43.2

○ **(투자) 상반기 설비투자**(전년동기비 △8.3%)가 글로벌 금융위기('09上 △20%)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설비투자는 **부진 지속**

* 설비투자(전년동월비,%): ('13.2) △22.5 (3) △7.9 (4) △12.1 (5) △5.5 (6) △7.6 (7) △11.8 (8)4.6

2 평가 및 시사점

□ **최근 주요지표가 개선**되는 등 우리경제는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주요국 경기 회복과 함께 성장세 확대될 전망

○ **주력산업**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경기 회복 및 외환보유고 확충**으로 이어지며 **거시경제의 건전성 개선**

* 對美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13.6)6.3 (7)9.9 (8)17.9 // 對中증가율: (6)5.3 (7)14.5 (8)12.8
* 외환보유액 추이(억달러): ('12.3Q)3,220 (4Q)3,270 ('13.1Q)3,274 (2Q)3,264 (3Q)3,369

○ 다만, 美 **양적완화가 연내 축소될 경우 신흥국 경제 위기** 및 **엔저*** 기조 심화로 인해 **수출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

* (환율동향) 원/달러: (8月)1,117 → (9月)1,087 // 엔/달러: (8月)97.8 → (9月)99.3

○ 또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고용 및 생산능력이 감소**하여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장기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

□ 대·내외 **경기 위축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 추진** 필요

○ 미국發 리스크 등 **세계경제 동향을 면밀 점검**하고, **수출·투자·지역경제 등**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 지속 추진

○ **협력생태계 조성과 창조경제 구현**으로 산업 부문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고, **통상·에너지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

① 수출, 투자, 지역경제 등 **실물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
②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 함께 성장하는 **협력 생태계 조성**
③ 인재 양성과 新시장 창출을 통한 **산업부문 창조경제 구현**
④ **통상-산업간 연계 강화**로 국부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⑤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수급**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

Ⅳ.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

1. 실물경제 활성화 추진

1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성화 지원 강화

2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3 지역경제 활력 제고

1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성화 지원 강화

가. 추진 현황

□ **3차례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무역금융·보험 확대지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중국 내수시장 진출 등의 대책을 마련

○ **(무역금융·보험 확대지원) 11.1조원의 무역금융** 확대, 환변동 보험 인수한도*·보험기간** 확대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

* 환변동보험 인수한도 확대 : (기존) 2.5조원 → (변경) 3.0조원

** 환변동보험 보험기간 확대 : (기존) 최대 3년 → (변경) 최대 5년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중기수출지원센터 **One-Stop 서비스** 제공*, **수출첫걸음사업** 등을 통한 내수·수출초보기업 집중 지원

* 중기청 수출지원센터(11개소)에 KOTRA, 무보 등 수출유관기관 인력을 파견(54명)하여 현장밀착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중국 내수시장 진출)**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중국의 **3大 내수시장(소비재, 첨단소재·부품, 중서부개발)** 본격 진출 추진

* 농식품 구매사절단 초청 수출상담회(9.23~25, aT센터), 글로벌 파트너링 차이나(GP-China) 개최(6.28), 수출입안전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을 통한 통관편의 제공

○ **(수출애로 해소)** 부처별 유사 인증제도 통합, 전자무역 요금체계 개편 등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 추진(24건)

나. 향후 계획

□ **(무역금융 지원강화)** 내수→수출초보·유망→수출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수출 성장사다리기업 40개사 추가** 선정('13.10월)

* '13.8월, 수출 성장사다리기업 174개사 선정 완료

○ 중소형 플랜트 수주 지원 강화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내 수주지원반 및 수주지원센터**를 설치('13.11월)

□ **(마케팅 활동의 효율화·협업화)** 중국·신흥시장 중심으로 현장 중심 마케팅 집중하고, **지원기관·사업간 연계협력** 강화로 효율화 추진

○ 무투회의 및 **VIP 해외순방 연계 후속사업*** 추진, 신흥시장 대상 사절단·전시회 등 해외마케팅 신규 추진

* 중국 내륙·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시안 한국상품전" 개최(10.31~11.2)
中 글로벌 바이어 초청 대형 수출상담회 개최(11.27~29, 서울/부산)

<신흥시장 대상 해외마케팅>

동남아	전력기자재 동남아 로드쇼(11월, 마닐라), Korea Brand Showcase(11월, 쿠알라룸푸르)
아프리카	아프리카 구매사절단 초청 상담회(10월, 서울)
중남미	현지진출기업 한국상품전(10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쿠바 한국상품전(11월)
CIS	Korean Medical Fair in CIS(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해외마케팅 지원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및 운영 통합기준 마련, 범정부 차원의 사절단·상담회 맵 작성 등(12월)

□ **(무역인프라 확충)** 해외 진출정보 제공, 전자무역 활성화, 전문 무역상사 육성 등 무역인프라 확충 지원

○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해 One-Stop 정보제공, DB공개, 유료서비스 도입 등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개선방안'** 마련(13.10월)

○ 전자무역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 개편 및 서비스 확충** 추진('14.상반기)

○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 및 정부간 수출계약(G2G) 원칙·절차 등 규정하도록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추진('13.하)

□ **(손톱밑가시 제거)** 중기수출지원센터(중기청), 업종별 협회(산업부), 현장방문(각 부처)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 지속 발굴

○ 신규로 발굴된 애로사항은 무투회의, 수출투자지원협의회(산업부 장관 주재)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2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가. 추진 현황

□ **3차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투자애로 해소** 추진

○ **(투자애로 발굴)** 30대그룹 투자간담회(4월), 주요그룹 회장단 간담회(8월), 산업체질강화위원회(7월·9월)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투자애로 발굴**

* 30대그룹은 '13년에 연초 계획 대비 5.9조원 증가한 총 **154.7조원**의 투자를 계획 (전년대비 12%↑)

< 1·2·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

무투회의 주요 안건	주요 내용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공공기관 부지·여유녹지 등을 활용한 공장증설 지원 등
융복합 촉진	융합 제품 인증 신속처리(fast track), 복수인증 간소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노후산단 리모델링 및 도시지역 산단 공급 확대 등
입지규제 개선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개선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환경규제 개선	화평법 등 하위법령 제정 시 기업의견 반영 경로 마련
중소기업 지원	중고설비교체 펀드 증액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선 등

□ **외국인투자 및 U턴투자 활성화**

○ **(외국인투자) '고용효과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방안'** 마련 ('13.9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

* 외투지역 지정요건 : (현재) 업종별 투자금액 → (개편후) 고용창출 요건 포함
* '1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FTA효과에 따른 美·EU 지역의 서비스업 투자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12.5% 증가한 **80억불** 기록

○ **(U턴투자)** 우리기업의 U턴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13.8월)

* '12.4월 정부의 'U턴 기업 종합지원 대책' 발표 이후, '13.9월 현재까지 44개사가 U턴을 결정하고 지자체와 MOU 체결

○ **(경자구역)** 경제자유구역내 핵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13.7월)하고 **개발관련 규정 정비**

* 시행령 개정('13.8월)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단위지구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 확대,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 (25~50%→25%)

나. 향후 계획

□ **(투자애로 해소)** 기업 현장 중심의 **투자애로 발굴 및 해소** 지속 추진

○ **1·2·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이행

*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외촉법 개정, 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등

○ 올해 **30대그룹 투자계획(154.7조원)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투자애로 지속 발굴 및 해소

○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12월, 관계부처 공동)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美·中·日 등 핵심투자국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집중 전개**

* (美) FTA효과를 활용, 아시아 시장선점을 노린 첨단기술, 신산업분야 투자 유치
* (EU) 첨단 부품소재 및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고부가 서비스업 유치
* (中) MICE, 생활산업, 문화컨텐츠, FTA활용분야 등 투자협력 모델발굴 등

□ **(U턴투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U턴 유망 업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 강화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후 경쟁력을 가지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인력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 **(경자구역)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입법 예고중)을 통해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주요 과제의 입법화 및 규제 완화** 지속 추진

*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공모제 도입, 지자체 사무특례 환원, 예외적 일괄 승인제 도입 등

○ **경제자유구역도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지정근거 마련 추진 (외촉법 개정)

○ GCF 사무국을 유치한 송도를 중심으로 **경자구역을 의료·관광·교육·전문서비스·금융 등이 집적화된 서비스허브화** 지속 추진

3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가. 추진 현황

□ **시도 단위 특화산업과 광역권 선도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13년, 5,900억원)

○ 시·도별 특화산업을 선정,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서비스(인력양성, 마케팅 등)를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13.6월~)

○ 테크노파크(TP)를 일자리 창출과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영혁신 추진

* 관리감독 규정 강화, 평가기능 분리, 지역일자리 진흥기관 임무 부여 등

□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제3차 무투회의, 9.25)

○ 단지별로 **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하여 산단 공간재편을 유도하고, **TP, 전문硏 등 산업기반시설을 이전·집적**하여 혁신역량을 강화

○ 부처별 산단관련 사업을 연계·활용하여 보육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공동 기숙사 등 **문화·복지·편의시설을 대폭 확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

○ 혁신·기업도시 및 세종시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고, **대기업**이 지방에 **신규로 투자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13.3월~)

○ 신·증설투자 지원대상을 선도산업에서 특화산업까지 확대('13.7월~)

나. 향후 계획

□ **시·도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 추진

○ 시·도 중심의 지역특화사업을 확대하여 주력 **제조업 및 전문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해양플랜트 설계·디자인, 신발디자인, 반도체 설계, 레져선박산업 및 관련 서비스 등

○ 인위적 **행정구역 단위의 現광역사업을** 산업생태계와 기업 수요 기반의 시도간 자율협약에 의한 **산업협력권사업*으로 전환**

* 예시: (전남·경남·부산) 해양플랜트, (충북·강원) 의약바이오-의생명 등

○ 시도별 산업생태계와 지원혁신역량 전반을 망라하는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중심 지역산업육성체계 확립

* 지역특화산업 등 시·도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추진

□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의 차질없는 추진

○ 부처합동*으로 **'14년 2개, '17년까지 총 17개 단지를 선정·지원**하여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에 정부역량을 결집

* 리모델링 단지 선정·지원을 위한 '정부협의체' 구성('13.10월)

○ 산업단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합용지제도 도입***, **입주업종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14.6월까지 산집법 개정 추진)

* (현행) 산업, 지원, 공공시설용지 분리 → (개선) 모든 시설의 복합입주 가능

** (현행) 연구개발업 등 13개 업종 → (개선) 20개 업종(7개 추가)

○ **산·학·연 협력체** 구성 촉진*, **산학융합지구** 조성, 기업주치의 센터 확대('13년 4개 → '14년 6개) 등을 통해 혁신역량 강화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13)544억원 → ('14(안)) 577.3억원

○ 보육시설, 문화센터, 공동기숙사, 도서관 등 **문화·복지·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

*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오피스텔, 공동기숙사 확충 등) : ('13)110억원 → ('14안)220억원

* 산업시설구역 내 공동 주거·보육시설 설치 허용 위한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13.12월)

□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강화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설비투자 중심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입지 보조는 단계적으로 축소('14.2월)

○ 지방투자 상담회, 투자희망기업 지방투어, 투자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방투자 분위기 조성('13.11월~)

2. 협력 생태계 조성

1 **중소·중견·대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2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3 **유통법의 차질없는 시행 및 상생·발전 유통생태계 조성**

1 중소·중견·대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가. 추진 현황

□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동반성장 문화 형성 및 협력 활동 심화

○ 공동혁신활동의 실적을 나누는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대**

* 도입확인기업('12년말 77개→'13.10월 91개), 공유과제('12년말 839건→'13.10월 2,296건)

○ 협력사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제관행을 개선

* 공공기관(59개)에 시범 도입('13.7)하고, 향후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 추진('14년)

○ **납품단가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유도

* 조사결과 해당기업 통보(장관친서)하고 동반성장지수평가('14)에 반영 추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으로 지속 모니터링, 일부 업종은 공정위에 추가 조사 의뢰

* 동반성장 여건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중기중앙회 체감도조사 9.29)

□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을 2·3차 협력사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혁신을 추구하는 **「산업혁신운동 3.0」** 출범(6.18)

○ 주요 대기업 그룹*(5년간 2,055억원 출연) 및 중견기업(15개社), 대한상의 등 10개 경제단체(추진본부 구성), 정부(산업부·고용부·중기청 사업 연계) 참여

* 삼성, 현대차, 포스코, LG, 현대중, SK, 두산, 롯데, 한화, KT, 효성(11개 그룹)

○ 1차년도 참여 중소기업 1,300여개社 모집(연내 300여개社 추가 모집)

나. 향후 계획

□ 1차 → 2·3차기업으로 **동반성장 저변을 지속 확대**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100여개사로 확대**하고, 참여 중견기업과 2·3차와의 협력을 **연구개발, 글로벌진출 등으로 질적 향상**

* 중견-2.3차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협약 확대, 중견기업 동반성장지수 포함(동반위) 등

○ **동반성장지수 체계를 개편**하여 2·3차와의 동반성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유인 강화

○ 「산업혁신운동 3.0」의 내실있는 추진 및 **성공사례 발굴·확산**

* 단체본부 및 컨설턴트 대상 평가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CEO 교육 및 교류회('13.11월~'14.2월)를 통하여 혁신사례 전파

□ 전속거래 요구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조사·개선하여 우수 중소기업이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하기 위한 **거래 관행상 규제해소 추진**

2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가. 추진 현황

□ '17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사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46개사를 **후보기업**으로 선정

* 목표 : <기업수(개)> ('12) 217 → ('17) 400, <수출액(억달러)> : ('12) 648 → ('17) 1,000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추진방안**을 수립('13.9. 경장)하고 간담회 개최

나. 향후 계획

□ 후보기업들에 대해서는 물량 위주 지원시책보다 **지식 위주 고급 플랫폼 서비스 제공**

* (플랫폼) 전담창구, 후보기업간 교류 협력의 공간,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운영규모 등은 추후 확정

① **(4대 플랫폼)** 후보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위해 시급하다고 느끼는 **전략·금융·인력·마케팅 분야**에 대해 전담 창구인 **정책플랫폼** 운영

* (전략) 글로벌 로펌·컨설팅회사 등과 커뮤니케이션 지원(중견연)
(금융) 사모펀드 조성, 회사채 발행 등 금융 분야 종합 지원(기업·우리·신한)
(인력) 우수인재 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 지원(KIAT)
(마케팅)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및 마케팅 전략 구축 지원(KOTRA)

② **(기업 밀착지원) 프로젝트 매니저**(PM)제도, **멘토-멘티** 결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밀착 지원

* (PM) 정부와 지원기관들이 각 1인씩 구성하여 후보기업들의 정책수요를 지원
(멘토제도) 수출 1억불을 달성한 글로벌 전문기업과 동포경제인을 멘토로 지정
(이력관리) 후보기업에 대한 글로벌화 실태조사·정밀진단 등 이력관리 추진

③ **(맞춤형 지원시책)**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기술, 무역투자, 금융, 인력분야 20여 개 핵심 기업지원 시책**을 후보기업들에게 우대 지원

* 장차관 등 정부 고위급 해외순방시 후보기업을 정부대표단에 우선 추천, Intellectual Discovery의 지적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서비스 활용 지원

□ 금년 **11월 지원 플랫폼을 출범**시키고 '14년 상·하반기 각 1차례씩 **추가 선정**할 계획

3 유통법의 차질없는 시행 및 상생·발전 유통생태계 조성

가. 추진 현황

□ '12.4월부터 대형마트·SSM 영업규제가 시행되었으나, 대형유통업계의 소송으로 **영업규제가 무력화됨에 따라 갈등 심화**('12.7)

□ 대·중소 유통업계는 갈등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SSM 출점 자제, 자율휴무 실시 등 **상생방안에 합의**('12.11)

□ 업계의 자율적인 상생방안 합의와는 별도로 대형마트·SSM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13.1)

* 영업규제 : 시간제한 0~8시 → 0~10시, 의무휴업 월1~2일 → 공휴일 2일
* 출점규제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개설계획예고 등

□ 한편, 농어민·납품업체·입점업체 중심으로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제기('13.5, '13.6, 반대집회 개최)

나. 향후 계획

□ **유통법 하위법령 정비** 및 지자체 **조례 개정** 지원

○ 그간 2차례에 걸쳐 **유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지자체 회의(수시), 설명회(2회) 등 지자체 조례 개정을 지원

○ **지자체 조례개정 작업이 9월부터 본격 진행**되고 있는 바, 개정된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동향 모니터링

* '13.10월 현재 개정 전 유통법에 따른 영업규제 시행 지자체 109개, 개정 법률에 따른 영업규제 시행 지자체 16개, 자율휴무 시행 지자체 50개, 영업규제 미시행 지자체 54개

□ **상생·발전형 유통생태계** 조성

○ 고령화, 저성장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13.11)

○ 유통업계 결속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제1회 유통주간 행사」** 개최('13.11.14~17))

○ 대·중소 유통업계간 **상품취급점 관련 합의*** **도출** 및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매유통분야 협력 사업 추진 유도('13.10)

* 대형유통기업 상호가 포함된 간판·유니폼 사용금지 등

3. 산업부문 창조경제 구현

1 **창의·융합형 우수인재 양성**

2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육성**

3 **창의를 실현하는 산업환경 조성**

1 창의·융합형 우수인재 양성

1. 고급두뇌 역량 강화

가. 추진 현황

□ 우리 산업은 조립과 가공, 대량 생산체제 등에서 강점이 있으나, 고부가가치 영역인 **기획·설계 등 가치사슬 상류 분야**는 **취약**

* 국내 조선사가 전세계 해양플랜트의 31%('12년 219억불)를 수주하고 있으나, 설계역량 부족으로 **부가가치 절반 이상이 해외로 유출**

□ **제품의 부가가치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획·설계·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고급두뇌 역량을 강화**할 필요

⇨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13.7월)**

나. 향후 계획

□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고급두뇌 인력 양성 및 확충**

○ **(엔지니어링) 'ENGINEERING 연구센터(ERC) 신설**을 통한 공과대학의 엔지니어링 교육·연구기능 강화('17년 20개 목표)

○ **(SoC-SW) 'SoC-SW 융합과정 개설 대학'** 확대('20년 30개 목표)

○ **(디자인)** 스타일링 중심 디자인교육을 공학중심으로 강화한 **엔지니어링 디자인** 융합 대학 확대('13년 17개 → '20년 30개 목표)

□ **공학교육 강화**를 통한 **우수 학부인력 양성** 추진

○ **전국 공과대학 교육과정**, 기업의 인력수요 등 **실태조사**를 실시('13.10월)하고, 이를 토대로 **「공학교육 강화방안**(가칭)」 마련('14.上)

* 공과대학 전공 이수학점 확대, 기초과목 교육 강화 등 (교육부 협력)

□ **고급두뇌 전문기업 지정**을 통한 **기업 역량 제고**

○ **「고급두뇌 전문기업 지정制」** 도입('14.上, 기촉법 시행령 개정 등)

○ 고급 두뇌 전문기업용 R&D 프로그램 신설, 인력양성 지원 강화 등 **「고급두뇌 전문기업 지원방안」** 마련('13.11월)

2. 일자리 창출과 전략분야 인력양성 확대

가. 추진 현황

□ 범 정부 차원의 『**고용률 70% 로드맵**』 수립 (6월)

○ 융합 신산업 육성, 글로벌 전문기업 지정, 산업혁신 3.0, 해외진출 기업 U턴 촉진,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개편 등 10개 산업부 과제 발굴

* 고용률 70%는 도전적 과제임을 감안하여 산업부 차원의 정책방안 추가 마련

□ 『**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방안**』 마련 (9월, 경장회의)

○ 해양플랜트, 임베디드 SW, 뿌리산업, 섬유·패션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4대 전략산업의 인력양성·공급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인력양성 시급성, 他 산업 파급효과 (Spill-over), 인력부족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향후 계획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산업정책방안**』 수립 (4/4분기)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기업 현장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저해요인 해소, 근로자 인식개선 및 홍보방안 등

○ **(청년층 해외일자리 확대)** 국가별 新 해외진출모델 정립, 국내 기업의 해외 대형프로젝트 수주와 청년층 동반진출 지원 등

□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인력양성 분야**에 집중 (4대산업 전략 후속조치) 하고, **예산편성과 연계한 新 인력사업 성과시스템** 마련 (12월)

○ **(4대 전략산업)** 해양엔지니어링 장학금* 신설, 대학 SW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 아웃도어 등 섬유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 양성 등

* 영국, 미국, 노르웨이 등 유수 해외대학의 석·박사 과정 참여를 지원

○ **(성과시스템) 산업, 에너지, 무역 분야** 인력사업의 체계적 총괄 관리를 위한 **평가 추진체계, 지표 도출** 등 성과시스템 마련

* 현재 성과분석은 추진실적에 대한 데이터 집계에 그치고 있고, 성과품질의 적정성·자원의 효율적 활용도·환류 등을 고려한 체계적 성과분석은 미흡

2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육성

가. 추진 현황

□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전략 추진

○ **내장형 소프트웨어**(Embedded SW)와 자동차 등 **6大 주력산업간 창의적 융합**을 통해 新시장 창출 효과가 큰 **대형·장기과제*** 발굴

* ①(자동차)자율주행 자동차, ②(항공)미래형 유무인 항공기, ③(전자)탈부착형 첨단 정보통신 기기(wearable smart device), ④(의료기기)대용량 정보(Big data) 활용 건강관리 플랫폼, ⑤(로봇)건강관리 로봇, ⑥(기계)첨단 신소재 가공 시스템

○ 친환경 선박의 지속적 개발과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역량 강화

* ('13.4월)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13.7월) 친환경특수선 생태계 조성방안 수립, ('13.9월) 해양플랜트 등 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11.11월)**」** 추진현황 점검 및 기술경쟁력, 시장상황 분석 등을 토대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추진

* 「제3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13~'16)」 수립 추진('13.3~10월)

□ 섬유, 철강, 기계, 뿌리산업 등 **전통 제조업의 혁신역량 확충**

○ 섬유, 철강, 기계 등 제조 기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산업간·지역간 융합, 서비스화 촉진 등 다각적 대응 모색

* (섬유) 대구섬유-부산신발간 연계, (철강) 철강-석유화학간 부생가스 교환, (기계) 중고기계 거래소 설립

○ 금형, 도금 등 뿌리산업 관련 법·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화·친환경화를 위한 연구개발·공정개선 지원 등 본격 추진

* ('12년) 「뿌리산업법령」, 「뿌리산업진흥계획」 마련 → ('13년) 핵심 뿌리기술 연구개발 지원(138개), 자동화·첨단화 지원(20개사), 뿌리기술지원센터 확대(5개→7개)

□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핵심 新산업 육성기반** 마련

○ 3차원 인쇄(3D Printing), **로봇산업** 등 새롭게 부상 중인 미래 新산업 육성 및 조기 산업화를 위한 성장기반을 착실히 마련

* (3차원 인쇄) 「3차원 인쇄산업(3D Printing) 발전전략 연구회」 구성 ('13.7월) (로봇)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수립('13.5월) 등

○ 소득·여가 증가, 튜닝·캠핑 활성화 등 사회 트렌드 변화와 섬유, 자동차 등 제조 역량을 접목시킨 **'레저·소비재 산업' 육성 추진**

* 국내 제조업(자동차, 조선)을 활용한 자동차튜닝과 레저선박산업 활성화
* 아웃도어 제품의 해외 진출과 전통수공업으로 제작된 생활 소비재 명품화 전략

나. 향후 계획

□ 창조경제 이행을 위한 **주력산업의 융합 경쟁력 확충**

○ 차세대 항공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6대 핵심 '내장형 소프트웨어'** 개발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투자지원 병행 추진

* 「창조경제 선도형 임베디드 SW·엔지니어링 대형 프로젝트」 수립 ('13.11월)

○ 기자재 국산화 제고, 중소 조선소 경쟁력 강화 및 해양플랜트 서비스 육성 등을 통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본격 육성**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고도화 전략(안)」 수립 ('13.말)

○ 전략 소재·소프트웨어 융합형 부품 관련 정부 연구개발 확대, 세계시장 진출 촉진, 민간투자 유도 등 **소재·부품 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

* 「세계시장 선도형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 수립 ('13.말)

□ 제조업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과 산업 활성화**

○ 아웃도어 산업 육성(섬유), 세일가스용 강관 개발(철강), 기계산업 서비스 집적단지 조성(기계) 등 신시장 창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촉진

○ 뿌리기술전문기업 확대, 뿌리산업내 동반성장 환경 조성 등과 함께, 입지·환경애로 해소를 통해 뿌리산업의 성장활력 강화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확대('13년 50개社), 대·중기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협력 포럼('13.11월) 및 부산도금단지·시화 등 입지대안 마련

□ 중장기 정책비전에 기반한 **미래 新산업 조기 산업화** 촉진

○ **3차원 인쇄, 지능형 로봇, 레저, 바이오·나노** 등 미래 먹거리 조기 산업화를 위한 정책과제 구체화 및 차질없는 이행 추진

* △(3차원 인쇄) 「3차원 인쇄 발전전략」('13년말) △(레저) 「레저·소비재 산업 육성방안」('13년말) △(지능형 로봇) 제2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14년초) △(바이오나노) 「융합바이오 육성전략」 및 「나노융합산업 발전전략」('13년말)

3 창의를 실현하는 산업환경 조성

가. 추진 현황

□ 산업기술 R&D 성과제고 위한 **창의·자율형 R&D 지원체계 구축**

*** 산업기술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R&D 프로세스 전면 혁신 발표('13.5월)**

○ (**창의형 R&D**) 창의적 연구 촉진을 위해 개발목표 및 수행에 관해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유소액형(grant) 과제 신설**

○ (**자유주제형 R&D**) 중소기업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창의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내 **'자유공모형' 비중 제고**

* 현행 20%에서 '17년 50% 수준으로 제고(신규과제 기준)

○ (**기술-시장 연계한 복합과제**) R&D 과제기획시 글로벌 시장 및 소비자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외 전문가, 디자이너, 시장전문가 참여제도 도입

* 산업핵심기술개발(바이오의료기기, 로봇,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추진**

***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산업발전 전략 발표('13.7월)**

○ **'BI 사업화 전문회사' 및 'BI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

- (**초기시장 창출**) BI제품인증* 도입, 마케팅·홍보전략 수립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사업화 위험 완화

* 금년 중 우수 BI 제품GBP(Good Business Idea Product) 인증제 신설 (기표원)

- (**기반서비스 지원**) 10개 업종별 특화 지원기관 지정을 통해 아이디어 권리화, 사업 모델 마련 및 R&BD 연계 등 사업화 지원서비스 제공

* 가전, 생활용품, 지식서비스, 디자인·엔지니어링, 바이오헬스, 자동차·항공, IT, 신재생 등 에너지, 기계·조선·플랜트, 플랫폼서비스

○ **'BI 중소기업'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정책펀드 및 저리 대출·융자 확대

나. 향후 계획

□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대형 과제 발굴 추진**

○ 업종별 27개 실무작업반(산학연 전문가) 구성을 통해 도출된 **기술분야에 대한 사전 기획 등 세부추진방안 수립**

* 중소형 과제는 '14년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대형과제는 '14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산업간 창의적 융합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기술개발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인증, 표준 등 사업화도 고려하는 R&BD 추진

□ **비즈니스 친화적 R&D 사업화 지원체계 강화**

○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NTB) 등록기술 **DB의 품질을 제고***하고, **개방·공유****하여 **기술기반의 비즈니스 창출 촉진**

* 스마트폰 등 편리한 모바일 UI(User Interface)를 통해 일반 국민이 공공기술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앱 개발·보급

** 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등에게 NTB 기술정보 DB를 Open-API 형태로 공개하여 新비즈니스가 창출형 정보로 가공

○ 전문硏-중소기업간 **'협력 연구실 프로그램(Collaboration Lab)*'** 추진, **'혁신 상품권(voucher)制**'**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新시장 선점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원을 전문硏으로 파견하고, 産-硏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여 연구개발과 사업화 간 간극 최소화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취업 유도

** 중소기업-정부간 R&D투자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게 전문硏의 연구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성공 개발기술은 참여기업에 즉시 이전

□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한 산업기술인프라 구축**

○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고경력 우수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14년, 230억원)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활용플랫폼(E-Tube)을 구축**하고, 장비 검색, 구매, 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비활용률 제고

⇨ **「제6차 산업기술 혁신 5개년 계획('14-'18)」 수립('13.12월)**

4. 통상-산업간 연계 강화

1 개방형 통상정책 지속 추진 및 성과 극대화

2 전략적 산업자원통상협력 추진

3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인프라 확충

1 개방형 통상정책 지속 추진 및 성과 극대화

가. 추진 현황

□ 동아시아 통상질서 재편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하고, 신흥국 및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산업·자원 협력을 통한 **상생형 FTA** 추진

* WTO 체제 약화, 미·EU FTA 추진 등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하는 전략 필요

○ **한-중 FTA 1단계 협상*** **마무리**(9월), 한중일 FTA(7~8월 2차 협상) 및 RCEP(10월 2차 협상) 협상을 통해 지역경제통합의 주도권 확보 노력

*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품목수 90%, 수입액 85%를 관세철폐하는 모델리티에 합의

○ 신흥국의 개발 및 협력수요에 부응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수출 수요가 큰 **인니**(9월 5차 협상)**·베트남**(5월 2차 협상)**과의 FTA** 추진중

* 인니측은 한-인니 CEPA에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및 능력배양에 최대 관심

□ 쌀 관세화 유예만료 등 현안에 대응하면서, 도하개발어젠다(DDA) 및 복수국간 협상 진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14.12.31일자로 만료함에 따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대응 준비작업 진행

○ 진행 중인 **DDA 조기수확***,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및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참여

* DDA 중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최빈개도국(LDC) 등 3개 분야
- '13.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조기수확, ITA 확대협상 타결 등 성과 도출을 위한 협상 진행 중

□ FTA 활용현황 및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

○ 특히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6.27일, 대경장)

* 세부과제(43개)로 분류, 과제별 추진계획을 마련(7.16일)하여 차질없이 시행 중

○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FTA 활용촉진 협의회**(1차관 주재)'를 통해 관계부처·유관기관과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및 **지속적 점검**

나. 향후 계획

□ 현재 추진 중인 양자 FTA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한-콜롬비아 FTA 비준 등 기체결 FTA 후속조치 등을 **종합 점검·추진**

○ 한-중 FTA **2단계 협상 개시**(11월), 한-인니 CEPA **연내 타결을 추진**하며, 영연방 3개국은 **연내 협상을 재개**하여 이익균형을 통한 타결방안 모색

○ TPP는 영향분석, 협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우리 입장 정리**, 한-EU FTA 개정(크로아티아 신규 가입),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등 추진

□ 교역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방침을 수립하고 분야별 무역자유화 확대를 위한 다자차원의 협상에 적극 참여

○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하에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한 **정부입장 결정** 후, 관련 **대내외 절차 추진** 예정

○ DDA 조기수확 및 복수국간 협상 참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서비스업·IT 품목의 **수출기반 확충** 도모

□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

○ **FTA 콜센터 1380** 및 **인터넷 기반 콜센터 구축**(10.8일 운영개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애로를 쉽고 빠르게 해소**

* 콜센터 설치 운영('13.6.25일~) 중 온라인 포털 FTA 1380 운영계획보고('13.8.29일 제4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보고, 10.8일 운영개시)

○ 협력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제고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 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지정** 등 제도시행(하반기)

* 제3자 원산지 확인 시범사업 운영방안 보고·시행('13.8.29일 제4차 협의회)

○ FTA 성공사례 및 비즈니스 경진대회(10월), CEO 교육 등을 통해 **FTA 활용 모델 개발 및 기업의 FTA 활용 동기부여**

○ 사후검증 자가검증 수단 개발(9월)·합동설명회(하반기) 등을 통해 **사후검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완화** 도모

2 전략적 산업자원통상협력 추진

가. 추진 현황

□ **新통상로드맵을 수립('13.6)**, 국가별 추진여건 및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통상 협력 추진 중**

* FTA 위주 협력(미, EU, 중, 일), 산업발전 중심협력(인니, 베트남, 중남미, 미얀마), 에너지·자원 연계협력(중앙아, 모잠비크 등) 등

○ 중국*, 베트남** 등과의 산업·자원협력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통상협력 강화, 베트남 원전진출 및 플랜트 수주기반 조성**

* 한-중 경제통상협력수준제고에 관한 MOU

** 베트남 응이손II석탄화력발전소 MOU, 융깟 석유비축 및 원전분야 공동협력

○ **수입규제 국내대응반**('13.7)을 구성하여 우리기업이 직면하는 **해외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대응체제** 마련

□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 ODA와 연계**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 및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

○ MDB 발주 프로젝트 등에 한국기업참여 및 재원조달 마련 추진 중

나. 향후 계획

□ **신흥국과의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유리한 진출기반 조성

○ **동남아, 중앙아, 중남미 등과 산업·자원협력위***를 가동, 프로젝트 수주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애로해소 적극 추진

* 한-베 원전·산업·에너지 협력 공동위(11~12월), 한-브라질 자원위(10~11월), 한-우즈벡 산업자원위(10월) 등

□ 다자개발은행(MDB)과 연계한 **프로젝트 금융 조달**을 모색

○ 산업부-ADB 에너지포럼(12월), WB 그린비즈니스데이('14.2) 개최

□ **중소·중견 기업의 신흥국 진출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및 개발협력(ODA), 기술협력, 인력교류 등 다각적 협력방안 모색

* 정책방안 마련후 신흥국 기업,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 개최 ('14.상반기)

3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인프라 확충

가. 추진 현황

□ 정부 3.0 기조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산업계, 전문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통상 협업 커뮤니티'**를 구축

○ **(산업계)** 제조업·농업·서비스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여 통상 이슈에 대해 상시 소통 강화

* 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공동위원장) 주재하에 22개 분과 운영 중('13.5~)
** 통상산업포럼 출범식(5.23), 전체 분과 워크숍(7.12), 분과별 회의(6.20~) 개최

○ **(전문가)**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를 국회 추천인사 및 농어업·중소기업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편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산업부 장관 자문기구로, 3차례 위원회 개최('12.11.23, '13.5.3, '13.9.16)

○ **(국회) '통상절차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의무보고 사항 외에도 주요 협상 추진상황,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

* 제315회(4.23) 및 제316회(6.14) 임시회 산업위에 주요 통상현안 보고

○ **(관계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 강화

* 산업부장관(위원장) 및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 근거 규정 개정(9.24)
** 실무회의(차관보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참석) 4차례('13.4.19, 5.16, 6.5, 9.12) 개최

나. 향후 계획

□ 旣 **구축된 통상인프라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비관세장벽 등 우리기업의 **실질적 애로를 발굴·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활용

* 분과별 자문위원회 활성화,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포럼 전체회의 추진 등

○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구성**하고, 통상산업포럼 및 통상추진위원회와 연계하여 관련 사례 평가·대응

* 무역협회내 사무국 구성 완료('13.9월), 사례 발굴 및 보고서 발간 추진('13.12월)

5.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수급

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2 **전력 관련 주요 현안**

3 **안전 최우선의 원전 운영**

4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수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가. 추진 현황

□ 지난 5월부터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의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을 추진 (민관 워킹그룹(W/G) 운영)

□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에너지 수요 전망 등 공동작업 수행 (6~10월)

□ **민관 워킹그룹**이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하여 **정부 권고안** 발표

나. 주요 내용

□ (**정책 변화**) 경제성·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의 **지속가능성**, 국민 **삶의 질** 제고, **신뢰 회복**을 중요 가치로 고려

○ 전력수급난, 송전망 갈등 등 누적된 문제의 해소와 원전에 대한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책방향을 전환

* 공급위주 정책→수요·공급정책 균형, 원전/석탄 중심의 편중된 에너지믹스 개선 등

□ (**에너지 믹스**) 경제성 위주로 결정한 1차 계획의 에너지 믹스에서 탈피하여, **국민수용성·안전성·환경성** 등의 조화를 지향

○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하여 특정 에너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계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원전**은 균형잡힌 에너지믹스, 수용성 등을 감안, 1차 계획의 원전비중*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 1차 계획('08)은 '30년까지 원전 설비비중을 41%로 확대키로 결정

-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보급잠재량, 시장여건, 환경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급목표를 재산정

* 1차 계획에서는 '30년까지 1차 에너지기준으로 11% 보급목표 결정

□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가격정책**, **부문별 수요관리** 등을 통해 **전력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

○ **전기-非전기에너지** 간 소비왜곡 해소를 위하여 에너지 **세제 개편***, **전기요금 현실화**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추진

* (세제) 발전용 유연탄 과세 등 에너지원간 세제개편에 대해 기재부 협의추진
* (요금) 원전 안전성 강화, 송전망 보완, 온실가스 감축 등 안전/환경/사회적 비용 현실반영

○ **수송-건물** 등 분야별 대책*과 함께,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고효율 기기 보급확대,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 **수요관리 인프라** 구축

* '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연비 달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강화 등

□ (**분산형 발전시스템**) 계통안전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했던 대형-집중형설비 위주에서 탈피, **발전소입지**와 **송전망 운영**을 개선

○ **발전-송전계획** 연계수립, 신규 발전사업자에 대한 **입지 지침** 제시 등 송전여건을 감안한 입지 대폭 강화

○ **집단에너지·자가발전** 등의 **분산형 전원**을 확대해 나가고, 기술적 대안(초고압 직류 송전 등) 검토·의견수렴 강화를 통해 수용성 제고

□ (**지속가능성 제고**) **석탄발전**의 최상가용기술(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초초임계압) 의무화·**LNG발전** 가동율 제고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

○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복지** 확대·선제적 **갈등관리** 체계 마련 등 추진

다. 향후 계획

□ 10월중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그룹의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

□ 11월 에기본 정부안 마련,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추진

□ 12월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2 전력 관련 주요 현안

1.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

가. 추진 현황

□ **(금년 여름)** 원전 3기 정지로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맞았으나 **국민과 기업의 동참**과 감내로 **무사히 극복**

* 8.19일(월), 최대수요는 사상 최대치인 8,008만kW까지 상승 → 대책전 예비력 △198만kW로 하락 → 총 606만kW 수요 감축 → 대책후 예비력 472만kW까지 상승

○ 최근 전력수요는 낮으나, 발전기 예방정비로 공급여력도 최저 수준

□ **(금년 겨울)** 원전 3기 연내 재가동을 전제로, 지난 겨울이나 **금년 여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

* 원전3기 재가동이 안 될 경우 금년 여름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수급상황 지속

○ 공급 : 정지원전 3기 재가동(315만kW), 복합화력 발전기 출력 증가(약 300만kW)로 여름대비 약 600만kW 증가

○ 수요 : 향후 기상전망과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11월말 예측 예정

□ **(내년 여름)** 경기상황, 전기요금 조정 영향 등 **불확실성이 높으나,** 밀양갈등 및 신규원전 건설(신월성#2, 신고리#3) 등이 원만히 해결될 경우 **수급상황 개선 기대**

나. 향후 계획

□ 원전3기 재가동 여지 등을 반영하여 **겨울철 수급대책 수립**(11월말)

□ 장기적으로는 **적정수준의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요금 및 ICT 기반의 수요관리** 확대

2. 전기요금 체계개편

가. 추진 현황

□ **(요금체계) 용도별 요금체계***를 기본으로 용도 내 원가차이를 반영하여, **전압별** 또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으로 보완

*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 **주택용**의 경우에는 **누진제(6단계 11.7배)를 적용** 중

□ **(요금수준)** 그간 국제연료가격(유가, 유연탄) 상승 등 원가상승*으로 지속적인 요금조정에도 **5년 연속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 수준**

* ①예비력 감소에 따른 **고비용 발전기 가동 증가**, **②국제연료가격 상승** 등이 원인

○ 에너지원 상대가격 왜곡에 따른 대체소비 증가 등으로 **전기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악순환 지속

* 전력소비량증가율('08～'12): (한국) 19.3%, (일본) △4.6%, (미국) △1.9%, (영국) △6.6%

나. 향후 계획

□ 전기요금은 **원가에 기반한 요금체계**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다양한 요금제 도입**을 통한 **전기소비자 선택권 제고**

* 전기-非전기 간 합리적 에너지소비 유도를 위해,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조정 검토

○ **(주택용 누진제) 서민·중산층 가정**에서 사용하는 구간은 **누진제로 과도한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

* 필요성: ① 주택용 전력사용량 증가(10여년간 동일한 누진구조), ② 낮은 단계 요금의 '저소득층 보호 취지' 약화(전력 저소비가구≠저소득층)

○ **(일반용/산업용 선택형요금 확대) 업종별 부하특성,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도입·시행

○ **(일반용/산업용 계절별 및 시간대별 요금)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차등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 필요성: ① 동계 중 연중 최대피크 발생, ②야간시간대에 고비용 발전기 가동 등

3. 밀양 송전선로 공사재개 동향

가. 추진 현황

□ **(공사재개)** 지난 **10.2일(수)** 한전이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 재개**

○ **(설득노력)**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해 타당성·대안 관련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총리·장관 방문 등 **주민과 소통노력 전개**

- 송주법·개별보상 등 **합리적 보상제도의 기반마련**, 주민대표·한전 등이 참여하여 **특별지원방안 논의**

○ **(공사재개 불가피성)** 송전선로 정상공기(10개월), 신고리 3호기 준공일정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공사지연은 곤란**

□ **(현지상황) 철탑 5개소에 대해 작업중**이며, 약 100명의 반대 주민들이 경찰과 대치

○ 헬기로 장비·물자 운송, 기초굴착 및 콘크리트 준비작업 중

나. 향후 계획

□ **(불상사예방 노력) 주민안전 최우선 조치 시행중**

○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작업부지에 울타리 설치, 응급구조인력 현장대기, 반대주민용 쉼터 설치 등

□ **(지역지원)** 송주법 시행·한전 특별지원안·지역발전현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

○ 송주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준비

□ **(대화 노력)** 주민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

3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

1. 원전비리 재발방지

□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6.7)을 수립하여 이행

※ 10.10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원전비리 근절 후속조치 결과 종합발표

○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계기**로 ① 유착관계 근절, ② 구매제도 개선, ③ 품질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지난 6월부터 과제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제도개선) 완료**

< 종합대책 과제별 추진결과 >

분 야	과제별 추진결과
유착 근절	▪ 원전 퇴직자 재취업 제한 (6월완료) ▪ 원전 퇴직자 고용업체 등록 취소·입찰 제한 (8월완료) ▪ 한수원 인력 개선방안 마련 (9월완료)
구매 개선	▪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 (7월완료) ▪ 한수원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 (8월완료) ▪ 원전산업 경쟁촉진 방안마련(9월완료)
품질 강화	▪ 시험비용 한수원 직접지급 (8월완료) ▪ 제3기관 검증 (기관선정 완료)

□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발굴한 **원전산업 구조적 차원에서의 중장기 개선대책** 추진

* (위원장) 강호인 前 조달청장, (위원) 민간전문가 15인, (운영기간) '13.6~'13.9월

< 구조적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 >

문제점	개선대책	기대효과
공급사 참여환경 열악	① 원전기기·부품 시장 경쟁촉진	안정적인 부품공급망 확충
비합리적 구매절차 답습	② 구매절차 선진화	구매제도의 투명성 강화
체계적 구매관리시스템 미흡	③ 구매관리 시스템 강화	종합적 구매관리능력 향상
품질관리 사각지대 발생	④ 품질관리 강화	위변조 방지 및 사각지대 제거

□ 주요 대책들을 제도화하여 지속이행을 담보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전 공기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추진

* 대책의 제도화 및 이행감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가칭,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2. 운영원전 안전성 강화

□ **장기가동 원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극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원전 안전성 강화대책** 지속 이행 중

* 20년 이상 장기가동 원전(9기) 설비 선제적 교체, 원안위 주관 월성#1 Stress Test 실시('13.5월~)

** 해안방벽 증축·無전원수소가스제거설비 도입 등

□ 운영원전 안전성 확보의 핵심요소인 **숙련된 정비·운전 및 엔지니어링**(정비 종합관리) **인력 확충**

* 정비·운영 등 핵심인력을 포함한 원전 현장 안전 필수인력 증원 추진

3.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

□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출범 준비 중**

* 국회·원전지역·환경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공론화위원 추천위·원전 지자체·시민환경단체의 추천을 통해 공론화위원회 구성 준비 중

□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을 마련할 계획

4. 내실있는 원전 수출 지속추진

□ 旣수주한 **UAE원전 4기는 정상적으로 건설**이 진행 중이며,

○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수익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베트남·핀란드·사우디 등 추가원전 수주를 추진할 계획**

< 추가 수주활동 진행현황 >

국 가	수주활동 현황
베트남	원전 2기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
핀란드	원전 1기 입찰서 제출후 협의중
사우디	라운드테이블, 현지 로드쇼 개최 등으로 수주기반 조성중

4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가. 추진 현황

□ **(성과)** 적극적인 자원개발 추진을 통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10% 중반대**에 진입하는 등 **단기간에 양적 성장 달성**

○ 자원외교를 통해 신흥국에 폐쇄적이던 세계 석유자원 寶庫인 **중동지역에 사상 최초로 진출**하는 등 신규 진출지역 확대

□ **(한계)** 대형화 방침에 따라 신규 유·가스전 탐사보다는 자산 인수와 M&A에 주력함으로써 **자원개발 실력 향상은 소홀**

○ 차입금 증가로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

* 부채액('07→'12) : (석유공사) 3.7조원 → 18조원, (가스공사) 8.7조원→ 32.3조원
* 부채비율('07→'12) : (석유공사) 64% → 168%, (가스공사) 227%→ 385%

나. 향후 계획

◈ 공기업은 리스크가 높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민간은 시장성이 큰 분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

◈ **성과가 부진한 공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해 옥석을 가려 내실화 도모**

□ **에너지 공기업의 내실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방향타 재설정

○ **(탐사 중심)** 단기 양적성장 중심의 자원개발 패러다임을 전환, 탐사개발을 통한 유기적인 성장을 추구

- 단순 지분참여 방식의 투자비중은 낮추고, 운영권 사업과 탐사·개발 중심의 **중장기 자원개발 역량강화**에 중점

○ **(질적 고도화)** 투자 프로세스·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인력·기술역량 제고 등 질적 성장을 고도화**

○ **(재무건전성)** 부실자산 매각, 지분 유동화,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개선**

* 주요기업 부채비율('12년) : Anadarko(140%), ExxonMobil(94%), BP(151%), Statoil(145%)

- 수익성 높은 **핵심사업 위주로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을 통해 **공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 자산매각은 단기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성,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

□ 위험부담이 커서 민간기업이 소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리스크 분담**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

○ **(성공불융자)**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공불융자 예산 증액**을 추진하여 위험부담을 최소화

* (대우 미얀마 사례) 99년 대우 부도로 채권단은 미얀마사업 추진에 부정적 입장, 성공불융자 지원으로 미얀마 사업 추진을 결정, 대우는 탐사에 성공하여 국내 3년치 소비량의 가스전을 발견하여 향후 연간 3~4000억원 수익을 기대

○ **(투자위험보증)**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투자위험보증 여력을 확대**(現 1.9조원→'17년 4조원)하여 민간의 투자 유도

-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우량자산 유동화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원개발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

○ **(연관산업 동반진출)** 탐사 성공시 **연관산업**(조선, 플랜트 등)**에 우리기업의 패키지형 진출**을 도모하여 고용창출효과 제고

* 대우 미얀마 가스전 : 가스전 생산 플랫폼(포스코 플랜텍), 발전소 건설(현대중공업), 발전소 유지·운영(포스코 에너지) 등 국내기업이 총 14억불 수주

- 국내 자원탐사기업과 플랜트·조선 등 연관산업 기업들간에 **정보공유, 인센티브**(융자) **부여 등 협력 시스템을 구축**

5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가. 추진 현황

□ **홍보·캠페인 중심의 에너지절약에서 탈피**,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기술을 융합한 체계적인 **수요관리 방안 검토**

* 현장간담회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6.11~7.2) → 에너지 수요관리 포럼 운영 (7.3~8.5)

□ 「창조경제시대의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발표 (8.19)

나. 향후 계획

□ **(에너지저장장치(ESS))** ESS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ESS를 설치·운영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제도개선

* 비상전원으로 ESS 인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규모 전력 사용자(계약전력 30만kW이상, 27개), 공공건축물(1천kW이상)에 ESS설치 유도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중소·중견기업 **설치비용 지원**, 정책융자금 **평가가점 확대** 등을 통해 대형건물·에너지다소비업자의 EMS 설치 권장

□ **(고효율 기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엘이디(LED) 조명 교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스마트플러그 기능 내장 의무화**

□ ESS, EMS 등을 통해 확보한 수요감축자원을 공급발전자원과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력 수요관리자원 시장 형성**

○ 지능형 수요관리 사업자 육성, ESS·EMS 등 수요관리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육성**

□ 향후 5년간의 에너지 효율향상·수요관리 정책을 정립하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13말)